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지국운영에 관한 연구*

김문중**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강사)

본 연구는 일제하 발행된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상황과 지국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잡지 발행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비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잡지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의 지배방식을 문화통치로 전환한 환경 하에서 다른 신문과 잡지와 같이 일제 당국의 허가를 통해 등장했다. 잡지는 발행부터 편집 및 배포에 이르기까지 일제 당국의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영난·편집난·원고난으로 휴간과 속간을 거듭하는 등 발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발행금지과 원고압수가 빈번히 행해지는 악조건에서도 발행인은 잡지의 발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이들 잡지가 사회주의 사상단체나 조선공산당의 기관지로 발행되는 등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전파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전국에 설치한 지분국은 잡지의 배포뿐만이 아니라 운동의 전선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잡지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지식원(知識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잡지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지식인 중심의 발행 환경 등으로 인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제어: 잡지, 일제시기, 사회주의, 검열, 잡지 지국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사회주의에 관해 우리나라 신문이 보도한 것은 이미 『한성순보』의 창간호에서부터였다. 그 후 개화기에 등장한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 본 연구는 저자의 2006년도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보완 재정리하여 구성한 것임.

** jjongk@korea.ac.kr

신문도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상세히 보도하여 독자에게 전달했다(김문중, 2004).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은 192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민족주의진영이 주도한 3·1운동의 실패에 반해 러시아에서 성공한 사회주의혁명은 사회주의를 민족의 독립을 위한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등장시켰고, 1920년대 일제의 언론통제방식의 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언론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20년대와 30년대 각종 언론매체는 발행 주체와 성격이 사회주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 그 사상과 운동론을 빈번히 게재했다. 특히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20년대”(유재천, 1986, 231쪽)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개벽』, 『신생활』, 『조선지광』 등 각종 잡지가 사회주의 관련 기사를 활발하게 보도했다. 따라서 비록 일제의 소위 문화통치에 의해 열려진 제한적인 조건이기는 했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마법의 햇불”(Suh, 1967/1989, 127쪽) 또는 “처세의 상식”(『해성』, 2권 4호, 1932년 4월, 68쪽)으로 통용되며 폭발적으로 그 사상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당시 사회주의와 언론 간의 관계는 1925년 ‘조선공산당’ 사건 관련자 중 많은 수가 신문 또는 잡지의 전현직 기자 출신이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잘 알 수 있다(전상숙, 2004, 95쪽). 이것은 민간지 창간 초기에 기자로서 언론활동을 했던 지식인 중 다수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으로 신문을 활용했기 때문이며(박용규, 1994, 257쪽),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매체로 잡지를 선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Suh, 1967/1989, 74쪽). 특히 1920년대 들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지식인 부류가 일제의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잡지를 발행하거나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크게 증가했다.

그들은 합법적 출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잡지 발행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노력했다. 사상단체 ‘일월회(一月會)’가 기관지로 발행한 『사상운동』은 제3권 제6호에 실린 ‘편집여언(編輯餘言)’에서 “‘합법’ 아닌 ‘합법’ 아래에서 ‘합법’ 운동이라는 것은 가소롭다. 아니, 우리의 목적이 잡지내는 것이 안인 것은

물론이외다”라고 하며 잡지 발행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잡지는 영리를 위한 출판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운동매체였다. 사상이 같은 사람들이 그 출판물을 중심으로 모여 토론과 논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운동의 장으로 잡지를 활용하였다. 다음의 글은 이와 같은 당시 잡지 발행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오늘의 조선의 출판계를 살펴볼 때 가장 강렬히 눈기우는 것은 그 모든 출판물의 대개가 ‘영업’보다도 ‘주의’를 위하여 출판된다는 것이다. 일견 그것이 중립적 입장에 서고 오락적인 출판물이라도 오늘날의 조선의 특수한 사정의 영향을 힘입어 었던 나라의 그것보다도 못하지 안케 강렬히 정치적 색채를 띄우고 있다. 따라서 그 출판물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의의 동지 유지 동정자가 뭉키여 있는 것도 사실이 다(한철호, 1932. 12, 50).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하 우리나라의 언론과 사회주의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일제하 언론사(史) 연구에서 언론과 사회주의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 일제시대 언론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다(김민환, 2005, 279쪽). 따라서 사회주의 지식인이 모여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발행한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 연구는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학에서 이 분야에 대해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제하 사회주의의 확산을 위해 사회주의 지식인이 발행한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상황을 살펴보고 일제하 언론사에 사회주의 잡지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한계점을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일제시기 언론과 사회주의와의 관계성을 잡지, 그것도 사회주의를 표방한 잡지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채우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잡지와 관계를 맺었던 사회주의 지식인이 해방 이후에도 언론 및 정치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라 언론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기존문헌 연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언론학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국문학 분야 등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있어 왔다. 역사학에서의 연구가 대체로 사회주의의 역사 또는 사상사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사회주의 잡지를 참고자료로 이용한다면, 국문학에서의 연구는 일제 당국의 검열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학작품과 문인, 출판자본 등의 역학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우선 역사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과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당시 여러 운동주체가 발행한 기관지를 통해 살펴본 전명혁(1998)의 연구,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단체의 결성과 활동 등을 각종 잡지를 통해 연구한 박철하(2003)의 논문 등이 있으며, 특히 유시현(1990)의 연구는 보다 중요하게 잡지 자료를 이용하여 1920년대 전반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 수용과 발전 상태를 고찰했다. 다음으로 검열제도에 관한 국문학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제의 검열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문학담당자(작가, 편집자, 독자, 인쇄자본 등)들의 대응형태를 고찰하여 ‘쓰고자 했던 것’을 밝혀내려 한 한만수(2007)의 연구와 사회주의 잡지인 『조선지광』을 일제가 존속시킨 이유가 검열을 통해 사회주의의 대중적 이미지를 약화시키려 한 고도의 술수라는 사실을 주장한 한기형(2006)의 연구, 그리고 일제하 검열을 담당한 기구와 그곳에서 일한 검열관의 구성 및 변화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언론계와 문학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정근식(200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사회주의 잡지에 관한 언론학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잡지의 기사를 내용 분석한 연구와 잡지의 발행 실태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연구는 유재천(1988)과 김민환(200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유재천은 1920년부터 1941년 사이에 발행된 잡지 중 38종에 실린 기사 451건에 대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관련 기사를 양적으로 분석했고, 또한 주제 및

운동론에 관한 내용을 유목별로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공산주의 관련 기사가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그 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운동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운동론이 당시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시 잡지에 등장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이 당대의 현실적인 사회적 요구와 함께 민중운동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민환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발행한 잡지 가운데 『신생활』, 『조선지광』, 『비판』, 『신계단』 등 좌파계열의 네 잡지가 게재한 사회주의에 관한 논설 179개를 분석했다. 그는 양적 분석을 통해서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의 기저에 자리 잡은 것은 유물론이나 변증법과 같은 관념론적 철학사상이라기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자본주의 멸망론과 계급투쟁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논설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논설에 나타난 바로 한정할 때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맑스-엔겔스-레닌으로 이어지는 정통 맑스주의를 충직하게 수용했고 다른 이론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매우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연구에는 정진석(2001)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사회주의 언론의 생성과 활동을 기술하면서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를 비롯하여 일제하 사회주의 언론으로부터 북한의 언론까지를 설명했다. 이 연구는 일제하 사회주의 기사 집단과 1960년대까지의 북한에서의 언론 상황까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잡지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그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이 발간한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와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 1930년(昭和五年)판부터 1939년(昭和十四年)판까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인이 경영한 신문·잡지 등의 언론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정진석, 1978a; 1978b; 1983. 120~170쪽). 이 연구는 잡지의 발행과 유통에 따른 일제 당국의 허가와 금지 그리고 발행부수를 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조선총독부의 차별적인 언론정책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 논문이었다.

이상 언론학, 역사학 및 국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역사학 연구는 주로 사상사와 운동사라는 측면에서 잡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연구했음을 알 수 있고, 국문학 분야의 연구는 식민지 검열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이해집단에 대한 충실한 연구 성과가 있지만 사회주의 잡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도 일제하 신문과 잡지 등 언론 전반을 다루면서 그 일환으로 사회주의 잡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잡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하더라도 내용 분석을 통한 사상적 경향을 살펴보는 연구여서 이 또한 이들 잡지의 출판 상황을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인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사회주의 잡지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국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셋째,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이 갖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대상 사회주의 잡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일제하 사회주의 진영이 일제 당국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출판한 잡지를 선정했다. 합법적으로 발행한 잡지는 그로 인한 단점도 있지만 비합법적인 잡지와 달리 전국적이고도 공개적이며 상업적인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조선공산당이 창당하는 1925년

부터 일제의 사상범 관찰법 제정과 중일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일제하 사회주의 사상을 합법적으로 표현하거나 그 운동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지는(朝鮮軍參謀部, 1936. 8, 17~18쪽) 1937년 이전까지 발행한 잡지를 대상으로 했다. 다수의 잡지가 조선공산당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잡지 발행의 특징을 연구문제에 맞게 잘 고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사회주의 성향의 발행인 또는 다수의 필진이 참여하여 발행하는 잡지를 선정했다. 이들 발행인과 필진은 대다수가 조선공산당뿐만 아니라 ‘화요회’, ‘북풍회’, ‘일월회’ 등 사회주의 사상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들로 이들은 잡지를 이 단체나 당의 기관지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글을 통해 아군이라고 평한 잡지를 선정했다. 카프회원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한 김남천(1933. 5, 78쪽)은 『신계단』 8호에 게재한 글에서 “소위 좌익적 잡지를 기억에 올느는대로 추어보드래도 대중, 비판, 전선, 신계단, 이러타, 집단, 문예건설, 영화부대, 연극운동 등등을 세일 수 있다”고 하여 이들 잡지를 사회주의 진영의 잡지라고 하는데, 제9호에서는 “집단, 문학건설, 영화부대, 연극운동, 신계단, 대중, 이러타, 휴식장, 전선, 비판, 신흥, 문학타임스 등등”(김남천, 1933. 6, 82쪽)까지 언급했다. 또한 사회주의계열의 잡지에 계급적 문예비평의 글을 기고한 안덕근(1933. 2, 73쪽)도 비록 좌익적 임무를 100%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합법적 잡지 『이러타』, 『집단』, 『비판』, 『신계단』을 계급적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범주에 넣어 분류했다. 다섯째 카프 등 문예운동가들이 발행한 문예잡지는 제외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행한 시사잡지를 통해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활용할 사회주의 잡지는 『조선지광』, 『비판』, 『신계단』, 『사상운동』, 『집단』, 『전선』, 『노동운동』, 『이론투쟁』, 『대중』, 『현계단』, 『이러타』 등 11종의 잡지로 열람을 통해 연구한 잡지의 수는 총 104호이다. 이들 잡지의 발행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한편 이들 잡지 이외에 조선총독부 발행 문서와 연감, 신문, 잡지 등의 각종 자료도 본 연구에 참고로 이용할 것이다.

<표 1> 조선내 신문지 인가허가, 폐간, 실효(失效), 금지 건수 일람표

	허가·인가		폐간		발행금지·취소		허가·인가실효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919년	0	5	0	0	0	0	0	0
1920년	4	14	0	3	0	0	0	0
1921년	1	1	0	2	0	0	0	0
1922년	4	7	0	0	0	0	0	0
1923년	0	3	0	0	1	0	0	0
1924년	1	1	0	0	0	0	0	0
1925년	0	2	0	1	0	0	0	0
1926년	1	3	0	0	1	0	1	1
1927년	1	0	0	0	0	0	1	0
1928년	0	1	0	0	0	0	0	0
1929년	0	1	0	0	0	0	0	0
1930년	0	1	0	0	0	0	0	0
1931년	0	0	0	0	0	0	0	0
1932년	4	0	0	0	0	0	1	0
1933년	1	2	0	0	0	0	0	0
1934년	0	0	0	0	0	0	0	0
합 계	17	41	0	6	2	0	3	1

*출처 :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18~19쪽; 1932, 18~19쪽; 1934, 14쪽; 1935, 13쪽.

4. 사회주의 잡지의 출현과 개관(概觀)

3·1운동 이후 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신시정의 일환으로 언론기관을 우리나라 사람이 소유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¹⁾ 그러나 신청한 모두에게 발행을 허가하지

1) 3대 조선총독으로 취임한 사이토(齋藤實)는 ‘민의창달(民意暢達)’을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 신시정(新施政)’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의사발표를 허가한다는 의미였다(김규환, 1978, 166쪽).

않았고, 특히 사전의 원고검열을 피할 수 있으며 정치와 시사문제를 게재할 수 있는 신문지법에 의한 허가는 일본인에 비해 매우 적었다. 당시 잡지는 단체의 기관지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단체의 주의주장과 관련한 정치시사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잡지 경영상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표 1>은 조선총독부경무국이 펴낸 자료 중 1919년부터 인허가 일람표가 등장하는 1934년까지를 대상으로 신문과 잡지의 허가 상황을 일본인의 인가 상황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당국으로부터 신문지법에 의해 신문과 잡지의 발행 허가를 받은 수는 일본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판에 불리한 ‘출판법’에 의해서나마 잡지 발행을 시도하였는데, 1920년 이후 그 종류는 증가하여 1929년에는 6백여건, 1936년에는 6,158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잡지는 일제의 철저한 원고 사전검열과 제작 후의 납본검열 등으로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웠다(정진석, 1978b, 293쪽).²⁾ <표 1>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신문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17종의 신문과 잡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³⁾

본 연구에서 참고한 11종의 사회주의 잡지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조선지광』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이 잡지의 발행을 보증금으로 3백 원을 받고 신문지법에 의해 1922년 9월 12일 허가했다(잡지 4종 허가, 『동아일보』, 1922년 9월 16일자 2면). 이 잡지의 발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장도빈이다. 그는 개화기에는 『대한매일신보』에 재직하던 적이 있고(박정규, 2004, 83쪽), 일제 시기에는 1919년 12월 창간한 잡지 『서울』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 활동했다(김근수, 1980, 85쪽). 그러나 그가 이 잡지에 관여한 기간은 2년 정도였고, 발행한 잡지도 3호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후 이 잡지의 발행을 맡은 사람은 1920년대 후반 조선공산당에 관계한 김동혁이었다. 사회주의자 김봉렬, 김복

2) 우리나라 사람이 발행한 잡지의 허가 상황은 정진석(1978b, 294~297쪽)의 글 참조.

3) <표 2>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920년대 이전에 신문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신문과 잡지는 『매일신보』와 월간 잡지 『천도교회월보(天道教會月報)』, 『중외의약신보(中外醫藥申報)』 등 세 종이 있었다.

<표 2> 일제가 신문지법에 의해 허가한 신문과 잡지

	허가연도	종 류	개제(改題) 및 비고
동아일보	1920년	일간신문	
조선일보	1920년	일간신문	
시사신문	1920년	일간신문	시사평론 잡지
개 벽	1920년	월간잡지	
유도(儒道)	1921년	월간잡지	신민, 진흥
신생활(新生活)	1922년	월간잡지	주간에서 월간
동명(東明)	1922년	월간잡지	시대일보
대동신보(大東新報)	1922년	주간신문	
조선지광	1922년	월간잡지	주간에서 월간
대구상보(大邱商報)	1924년	일간신문	남선경제일보
중외일보	1926년	일간신문	시대일보의 실효로
현대평론	1927년	월간잡지	
동서상공시보	1932년	월2회신문	
내외호모(護謨)정보	1932년	월간잡지	
의약시보	1932년	월간잡지	
조선실업구락부	1932년	월간잡지	
기독신보	1933년	주간신문	

*출처: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6~7쪽; 1932, 5~7쪽; 1934, 38~41쪽; 1936, 4~6쪽; 1937, 4~5쪽; 1938, 4~6쪽.

진, 이기영 등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김기진, 1965.3/1989, 450~451쪽; 박용규, 2005, 93쪽) 그 밖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잡지를 무대로 활동했다. 조선공산당이 창당한 이후에는 당의 기관지로도 발행했다(梶村秀樹·姜德相, 1972, 89쪽).

임화(1939. 6, 65쪽)는 이 잡지가 『개벽』과 달리 처음부터 “노동사상 ‘쏘시알리즘’적 계몽과 논평을 목적으로 하여 간행된 것”이라고 하였다. 코민테른 고려부의 기관지인 『선봉』도 이 잡지를 유수한 사회주의적 출판물이라고 했다(『선봉』, 1925년 5월 8일자 3면). 한편 조선총독부경무국 고등경찰과 및 도서과에서 근무한 위종기(1928. 4, 36쪽)⁴⁾는 이 잡지를 “자칭 민간전투지로

4) 정진석(2005, 251쪽)은 위종기가 신문, 잡지, 출판물을 검열하는 업무에 전문가였을

서 일(一)에서 만(萬)까지 당국에 반항하기 위한 반항론과 반대하기 위한 반대론을 주장하는 반정부지”라고 규정했다.

『신계단』은 『조선지광』의 후신으로 등장한 잡지로 논조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해 창간호부터 58건의 기사를 삭제당하는 등 심한 탄압을 받았다. 조선공산당 사건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 일제에 체포된 유진희가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1932년 11월 유진희가 천도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반천도교 논설을 고정적으로 게재하여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맞서 프롤레타리아 영도권을 역설하였다.

『노동운동』은 1926년 봄에 결성한 ‘노동운동사’가 1927년 조합제(組合制)로 그 운영형태를 변경하면서 발행한 잡지이다. 조선공산당에 관계한 김준연, 김경식, 이항발, 송내호 등이 발행 초기 이사와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제2차 이사회에서는 임봉순, 박형병 등의 사회주의자가 이사로 새롭게 참가했다(『노동운동』, 제5호, 21쪽).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촌이나 공장 노동자에게 지식을 보급하려 했고, 따라서 소작문제와 공장제도에 관한 기사를 주로 다루고자 했다(『중외일보』, 1926년 12월 28일자 2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지 않고 일본에서 발행하여 국내로 들어온 잡지는 『사상운동』, 『이론투쟁』, 『현계단』으로 사상단체 ‘일월회’ 또는 조선공산당의 기관지였다. 일제가 일본 등지에서 발행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엄격히 검열하여 국내의 독자에게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심했다. 그 외 『집단』은 조선공산당의 재결성을 위해 한위건과 양명이 만든 ‘공산주의 자협의회’가 임회를 통해 공산주의의 선전을 위해 이용한 잡지이며, 『대중』은 계급적 의식을 갖고 있는 계급대중을 위하여 제1차 조선공산당에 참여했던 김약수가 결성한 ‘대중과학연구사’에서 편집 겸 발행을 맡아 발행한 잡지다. 그리고 『비판』은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검거, 투옥된 바 있는 송봉우가 창간한 잡지로 민족주의 우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게재했다. 통권 114호로 비교적 오래 발행했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운동과는 거리를 두었

것이라고 하였고, 정근식(2005, 36쪽)도 그를 가리켜 1920년대 조선인 검열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표 3> 사회주의 잡지의 개관

잡 지 명	분석잡지 총호수	발행기간	관여한 단체
사상운동	10호	25년 1월 ~ 26년 5월	일월회
노동운동	2호	27년 5월 ~ 31년 10월	노동운동사
이론투쟁	3호	27년 4월 ~ 28년 3월	일월회, 조선공산당
현 계 단	2호	28년 8월 ~ 29년 4월	조선공산당
전 선	4호	33년 1월 ~ 33년 6월	개인, 적벽사
조선지광	36호	22년 11월 ~ 32년 2월	개인, 조선공산당
신 계 단	11호	32년 10월 ~ 33년 9월	개인
집 단	2호	32년 2월 ~ 6월	공산주의자협의회
대 중	3호	33년 4월 ~ 6월	대중과학연구사
비 판	29호	31년 5월 ~ 40년 3월	개인
이 러 타	2호	31년 6월 ~ 36년 1월	사회실정조사소
합 계	104호		

*출처: 당시 발행한 신문과 잡지 등에 나타난 기사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발행금지압수 등으로 중간 또는 폐간일은 정확하지 않음.

다. 잡지 『이러타』는 1931년 ‘사회실정조사소’의 기관지로 창간한 잡지로 국내외 정세에 대한 조사나 연구 및 관련 문헌의 번역문을 주로 실었다. 노동 대중의 잡지를 표방한다는 이 잡지는 국제 정세, 사회문제, 노동운동에 대한 좌파의 인식을 보여준다(배성준, library.snu.ac.kr). 이들 잡지의 발행기간과 본 연구에서 분석이 가능한 발행 호수, 그리고 잡지의 발행에 관여한 단체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위의 사회주의 잡지들 가운데 『조선지광』은 이른 시기에 등장해서 100호까지 비교적 긴 기간 발행했기에 이 잡지가 겪는 과정은 이후에 등장한 여러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에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지광』이 일제 당국의 검열로 인해 발행에 곤란을 겪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후의 잡지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지광』이 처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조선지광』은 제58호(1926년 8월호) 권두언에서 ‘속간(續刊) 1주년을 마지

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잡지 발행에 따르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속간한 지도 임의 일년의 되었다. 햇수로도 일년 발행한 호수로 45개. 생각해도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경영난, 원고난, 편집난 이 삼난이 한 번도 한 호도 빠지지안 코 우리를 궁박(窮迫)케 해왔다. 이 일년 동안에 우리의 주위에서 곳이 삼난을 산출하는 배경안에서만 보아도 여러 가지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난이 잠재하고 표출하고 준동(蠢動)한다. …… 그동안 우리는 이 삼난 중에 자라왔다. 압력으로 역시 이 삼난! 운명적으로 질머진 이 삼난.

『조선지광』은 잡지 발행을 가장 어렵게 하는 점으로 경영과 원고,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를 들고 있는데, 일제 당국의 검열난까지를 포함하여 이것은 일제 하에서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난제였다(정진석, 1995, 6쪽). 잡지 『비판』도 창간호부터 “일난(一難)도 거북한데 왈(曰) 경영난, 왈 원고난, 왈 검열난”(허리를 펴면서, 1931. 5)이라며 그 발행의 어려운 사정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사회주의 잡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잡지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일례로 김동환은 『삼천리』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 『시대일보』를 비롯하여 몇 개의 잡지가 쓰러진 것은 “원고난, 경영난, 검열난의 3중 때문”이라고 썼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잡지보다도 사회주의 잡지는 그 논설이 가진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좋지 않은 조건에서 잡지 발행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기사에 대해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정진석, 1998, 20쪽). 따라서 사회주의 잡지는 거의 매호마다 ‘무가내하(無可奈何)의 사정’, ‘부득이한 이유’, ‘동무들의 경험으로 추측하라’ 등의 정황을 말하며 잡지 발행이 일제 당국의 검열에 의해 정상적이지 않음을 독자에게 알렸다. 다음에서는 『조선지광』이 잡지 발행의 난제라고 밝힌 검열, 경영, 편집, 원고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경영

1) 잡지 발행과 일제의 검열

일제시기 잡지가 허가와 검열관계로 일제 당국과 상대해야 하는 부서는 조선총독부경무국이였다. 신문과 잡지의 발행허가도 이곳에서 관장했다. 더 세부적으로는 경무국의 고등경찰과와 도서과였는데, 이곳은 일제 치하 언론을 탄압하는 주무부서였다. 이 부서는 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검열하여 삭제 또는 압수처분을 내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간을 명령하기도 하였다(정진석, 2005, 239쪽).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의 발행과 출판법에 의한 잡지의 발행이 서로 다른 점은 원고의 사전 사후 검열문제와 정치시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가 1930년대에 들어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의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출판법에 의해 발행하는 잡지도 시사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의 문제는 검열이였다.

신문지법이나 출판법이나 모두 잡지를 발행함에 있어 제약받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법의 적용이 잡지의 간행에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정해진 날짜에 발행을 해야 하는 잡지로서는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의 발행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잡지는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을 원했지만 일제 당국은 출판법을 고수했다.

출판법에 의해 원고 검열을 받기 위해서는 잡지의 인쇄 전에 원고를 검열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이 원고의 검열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형편이였다. 그래서 ‘검열제(檢閱濟)’를 뜻하는 ‘허가의 인(印)’이 찍힌 원고부터 인쇄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인쇄 작업 도중에 허가받은 원고가 들어오면 이것도 인쇄하여 잡지에 추가했다. 그러한 까닭에 잡지의 원고 배열상태가 좋지 않아 독자에게 이를 사과하기도 하였다(『비판』, 제10호).

다른 한편으로 잡지의 편집자는 검열받는 동안 그 다음 호를 미리 준비하기

도 했다. 월간지가 한달치의 기사가 아닌 두 달 내지 석 달치의 원고를 준비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년호가 점두(店頭)에 나왔을 때는 이미 2월호가 반수 이상 진척되었어야 하며 또 3월호의 계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고드름이 더덕더덕 매달릴 때 원고는 ‘봄의 수필’을 청탁하여 집필자를 새삼스럽게 놀래게 하며 초복도 오기 전에 ‘가을과 독서’니 하는 따위를 청탁하는 입장이 얼마나 쓰고도 괴로운 것입니까(조풍연, 1943. 2, 95~96쪽).

『비판』 1932년 8월호(제15호) ‘근고(謹告)’란에도 6월호를 59종의 기사로 삭제하는 등 수차에 걸쳐 편집하였는데 7월호 또한 검열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발행을 하지 못하여 결국 8월호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정해진 날짜에 잡지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 이유는 거의 검열과 관련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잡지의 ‘편집후기’에는 잡지의 발행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다음 호부터는 정해진 기일 내에 발행하겠다는 글이 자주 등장했다.

이에 비하면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은 정해진 시간은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일단 발행을 하고 동시에 납본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의 잡지 발행이 국내에서의 발행보다 쉬웠던 것은 납본제도에 의해 발행했기 때문이었다(김인덕, 1996, 307~308쪽). 조선총독부는 납본 이후에 문제가 있는 잡지에 대해서는 발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일단 발행된 잡지를 모두 수거할 수는 없었고 이에 따라 시중에 나올 수 없는 잡지가 독자의 손에 건네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지광』 제66호(1927년 4월호)는 검열 과정에서 일제 당국에 의해 압수당했지만 『동아일보』, 1927년 3월 31일자 5면; 『조선일보』, 3월 31일자 2면, 독자의 손에까지 전해졌다. 즉, 이 잡지에는 “‘카프’ 내에 제기된 방향전환론을 초기 주도한 박영희”(김재용, 1989, 33쪽)의 ‘문예운동의 방향 전환’이란 글이 실려 있는데 잡지 『예술운동』에서 이복만(1927. 11)이 이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 글을 읽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운동』 제2권 제1호(1925년 7·8월호)와 제2호(1925년 9월호)도 일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다고 제2권 제3호에서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어 신문지법이 갖는 잡지 발행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행한 잡지 『사상운동』이 국내로 들어와 사회주의 운동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에서 다섯 명의 청년이 『사상운동』 2백 권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다 검거된 사건이 그 예이다(『조선일보』, 1925년 4월 19일자 2면).⁵⁾ 따라서 일제는 조선에서의 출판물 발행보다 일본에서의 발행이 더 쉽기 때문에 발행소를 일본에 둔 출판물에 대해 엄중히 경계를 요한다고 하였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174~175쪽). 그런 까닭에 일본에서 발행한 『사상운동』의 경우에는 납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쇄소에서 직접 강제차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편집여언, 『사상운동』 제3권 제6호). 그러나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 발행이 원고의 사전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쇄까지 끝난 잡지가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잡지의 경영면에서 대단한 재정적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잡지가 어떤 법적 적용에 의하여 발행을 하던지 일제 당국의 검열이 지키고 있는 한 발행진은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⁶⁾

신문이 인쇄를 마치고 난 뒤 압수를 당하면 신문사에서는 호수(號數)가 없는 ‘호외(號外)’를 내보내게 된다(정진석, 1975, 58쪽). 잡지에 있어서도 발행권호 대신 임시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취한 발행 형태이다. 특히 『조선지광』의 경우에는 임시호가 또 다시 압수당해 계속해서 임시호를 준비한다는 기사가 신문에 적지 않게 등장한다. 조선인 검열관으로 경무국에서 근무한 위종기(1928. 4, 42쪽)는 불온한 기사를 찾기 위해 “어구(語句)말미(末尾)까지라도 유의검열”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검열관의 기

5) 일제는 일본에서 발행을 금지한 출판도서는 조선에서도 발매와 반포를 금지시켰다(山口吸一 編, 1939, 560쪽).

6) 한만수(2005. 8)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은 잡지가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의 절충적 형태인 ‘교정쇄검열’을 택했다고 말한다.

사 검열이 얼마나 세밀하였는지 알 수 있다. 김동인이 회고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위종기를 비롯하여 조선인 검열관이 특히 더 엄밀한 검열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⁷⁾ 물론 검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잡지의 배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집단』 제2호(1932년 2월호)의 경우가 그 예인데 검열을 통과한 이 잡지 15부가 함남 단천 우체소에 도착하자마자 단천경찰서에서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모두 압수한 것이다(『중앙일보』, 1932년 2월 29일자 3면). 이러한 상황은 허가받은 잡지가 알 수 없는 독자에 의해서 일제 당국에 고발당할지 모른다는 사실(김동인, 1969, 320~321쪽)과 함께 식민지하의 잡지 발행을 도처에 존재하는 검열과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조선총독부경무국의 원고 검열이 사회주의 잡지의 지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삭제 부분의 활자를 완전히 들어내 공백의 상태로 인쇄하는 경우이다. 『조선지광』 제62호에 실린 양명(1926. 12)의 글을 포함해서 이런 종류의 원고 삭제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나 ‘×’ 또는 ‘…’ 등을 삭제한 원고에 대체하여 인쇄하는 경우이다. 일본에서 발행한 잡지 『사상운동』에는 이런 표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해방’이나 ‘투쟁’, ‘혁명’ 등과 같은 글자 중 앞 글자 하나를 완전히 지우는 형태로 발행하였다.⁸⁾ 이 표기는 대체로 글자 수에 맞춰서 인쇄하고 있었기

7) 김동인(1969, 320쪽)은 검열에 종사하는 조선인은 자신이 한 검열을 일본인 상관에게 보고하는 관계로 과도하리만치 검열했다고 말했다. 김동인이 조선인 검열보조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8) 『사상운동』 창간호에 실린 ‘레-닌의 소전(小傳)’과 ‘유물사관요령해설’이 朴慶植(1983)이 편집한 영인본상에서는 서울대 도서관 소장 원본과 달리 ‘레-닌’자와 ‘유물’자가 삭제되어 있다(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의 『사상운동』 영인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데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창간호 이외에는 없어서 더 이상 확인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검열에 의한 부호 표기는 원본과 영인본이 동일하였다. 이 점을 남본과 발행이 1925년 3월 3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 잡지가 국내와는 법 적용이 다른 일본에서 발행하여 국내로 들어온 잡지라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서울대 소장 원본은 남본 검열 이전에 배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다면 『사상운동』 창간호는 두 번 인쇄하였거나 인쇄 도중 연판을 깎았을 가능성이 있으

때문에 당시 독자들은 그 표기 대신 들어가야 할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판독할 수는 있었다(言論人金三奎刊行委員會 編, 1989, 24쪽). 따라서 일제 당국은 검열에 의한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이런 표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자 1931년 3월 1일 서울의 각 잡지사 대표들이 총독부 경무국장 모리오카(森岡) 및 도서관장 다치다(立田) 등을 면담하고 잡지에 있어서 삭제된 흔적까지를 없애게 하는 데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동아일보』, 1931년 3월 12일자; 정진석, 1975, 56쪽에서 재인용).

세 번째로는 글자와 행을 한데 묶어 ‘차3자략(此三字略)’이라거나 ‘차3행략(此三行略)’ 또는 ‘이하3행략(以下三行略)’과 같이 밝힌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그 생략한 단어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이 전달하려는 전체 의미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잡지 『비판』 제23호에 실린 함철산(1933. 6)의 글이다. 그가 이 글에서 다룬 것은 일본이 만주점령을 견제하는 국제연맹에 맞서 그 연맹을 탈퇴하는 문제였는데, 전체 본문 236행 가운데 무려 178행이 삭제당해 글 전체의 논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함철산의 주장 중 대부분이 삭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상의 세 가지 형태가 하나의 논설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선지광』에 실린 김온(1927. 9)의 글이다. 이 글은 글 처음부터 ‘이상11행략’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에 부호를 표기하거나 공백을 검열의 흔적으로 남기고 있다. 네 번째로는 목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목차에 기재한 기사가 삭제되었을 경우 목차 전체를 다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지우고 그 자리에 ‘략(略)’이라고 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잡지 『신계단』에 많이 등장하는 형태로 목차를 다시 편집하는

며 혹은 검열 이전에 미리 배포한 것 이외에는 사후에 붓칠 등으로 글자를 지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창간호에 나타난 검열에 의한 부호 표기는 검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편집진이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사용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상운동』 원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검열에 대한 이와 같은 잡지 발행인과 저자의 대응 방식은 한만수(2001; 2007)를 참조.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와 이번 호에 어떠한 기사가 실리려 했는지를 독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종호(2005)는 잡지 『개벽』에서 검열에 의한 흔적인 ‘따붙이기’를 언급하였는데, ‘따붙이기’란 삭제 지시를 받은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 따로 인쇄한 것을 오려 덧붙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한만수, 2004. 12. 17, 46쪽). 이 표시는 잡지의 원본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1종의 전체 잡지 중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도서 소장본인 『비판』 1호에서 9호까지, 『조선지광』 제85호·87호·88호, 『신계단』 제1호에서 11호까지를 살폈으나 따붙이기를 발견하지 못해 사회주의 잡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검열은 잡지 발행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원고 압수 및 발행금지로 인해 여러 번의 임시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지의 재정적 압박은 잡지의 발행을 오래 지속할 수 없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할 것이다.

2) 잡지의 경영과 편집

사회주의 잡지는 처음부터 영리와는 거리가 먼 운동적 차원, 즉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발행한 잡지였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사상과 운동을 선전할 매체로 잡지를 활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상운동』에서 한림(1926. 2, 40쪽)이 맑스레닌주의에 관한 연구책자를 소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근래 조선내지의 운동이 소수자의 운동으로부터 대중화하여 감이 급속함을 따라 이래 기본적 허장(虛張)을 떠나 이론적 방면에서 침착(沈着)하는 경향이 완연하다. 각지방 조직체 내에 독서연구회의 족생(簇生)은 무엇보다도 이를 응변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와갓치 대두되는 신경향을 만일이라도 만족시킬 만한 교양재료가 전연 제로라 하여도 과언이 안일만큼 빈약하다. (중략) 차에 기재

된 연구과정의 서적은 현하 이곳에서 간행된 사상서적 중 특히 간명(簡明) 평이하고 중요한 것임을 선택한 것이다. 그 부류편성에 있어서 필자의 주관적 망단이 업슬수 업스나 초입문 제군의 사색도정상 사소한 힌트라도 된다면 행으로 생각한다.

위의 글을 보면 잡지를 통해 사회주의를 교육하고 선전하겠다는 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김약수도 당시 사회주의 잡지가 갖는 가치를 객관적 조건에 비해 너무도 뒤떨어져 있는 무의식한 대중에게 과학사상을 간명하게 소개하고 현실문제를 해설하는 것이라고 『대중』 ‘창간사’에서 밝혔다. 그리고 비록 당시의 정세가 잡지로 하여금 전반적 의의를 담을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잡지 『대중』이 전체의 운동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편린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대중을 대상으로 발행한 『이러타』와 『노동운동』도 노력대중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탄생한 노력대중의 잡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잡지라는 점을 강조하여 잡지의 계급성을 드러냈다.

이렇듯 그 발행의 목적을 우선시하였기에 사회주의 잡지가 영리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철저한 인식을 갖지는 못했다. 『조선지광』은 “입때까지 조선에서 잡지출판으로 그 자체가 수지를 계산해가며 자영해 나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편집여언, 『조선지광』, 제70호), 한철호(1932. 10, 50쪽)도 “오늘의 조선의 출판계를 살필제 가장 강렬히 늦기우는 것은 그 모든 출판물의 대개가 ‘영업’보다도 ‘주의’를 위하여 출판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나마 이들 잡지가 재정적인 수입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로 잡지의 구독료였다. 물론 잡지는 광고를 게재하였지만 대부분이 개인광고에 치우쳐 있었고, 또한 그 많은 ‘사고(社告)’ 가운데 광고의 유치를 공지한 것은 거의 없어 광고게재를 통한 경영 개선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반면에 잡지는 사고의 내용을 구독의 권유, 지사의 설치 그리고 밀린 잡지 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으로 채웠다. 특히 1920년대 후반기에 발행한 잡지는 독자에게 지대(誌代)를 납부하지 않아 잡지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빈번하게 호소하였다. 선금(先金)이라고 했음에도 잡지의 구독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던 것이다.

각 잡지가 구독료의 확보와 밀린 지대의 독촉을 위하여 독자에게 호소한 내용을 일부 잡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계단』 제2호(1929년 4월호) : 지대(誌代)를 기어히 완납하라! 전(前)독자는 지대 부족액을 즉시 완납하라!! 각 사회단체는 『현계단』의 절대독자가 되라!
- 『조선지광』 제58호(1926년 8월호) : 크게는 응원하지 못할망정 지대만이야 잘 주었스면 하는 것이다.
- 『사상운동』 제1권 제4호(1925년 5월호) : 독자여러분. 본지의 영속을 희망하십니까? 그러시거든 보내드린 지대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쓰거우면 우리들은 이 피가 썩지 때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 『비판』 제2호(1931년 6월호) :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선금을 보내지지 안코 폐지(弊誌)를 청구하신 분의게는 응하옵기가 어렵습니다.

1930년대에 출판한 잡지는 대개 지국을 통한 배포에 치중했기 때문에 독자 개개인에 대한 잡지 구독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잡지에서 독자에게 밀린 잡지 구독료를 납부해달라는 사고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대신에 모든 잡지가 선금을 먼저 받아야만 잡지를 보내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920년대의 잡지가 구독료 문제로 잡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다른 판매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지광』에 실린 다음의 글은 잡지 편집자가 얼마나 잡지 대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글이다.

실상 조선사람들은 신문대금이나 잡지 대금 갖흔 것을 잘 안내는 - 보기는 보아도 - 못된 버르쟁이가 있다. 잡지를 맨들려면 돈이 안들고는 되지 안는 것이다. 짜라 잡지 읽고 심흔 사람은 적어도 지대(誌代)만은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첫째 잡지경영하는 사람이 잡지를 헤나갈수 잇는 것이다. 인제부터 우리는 무대(無代)로는 책 한 권도 그저 보내줄 생각은 하지 안으려 한다. 그러다가는 맛참내 잡지도 못나고 말 터이니(편집여언, 『조선지광』, 제61호).

위와 같이 잡지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까닭에 필자에 대한 정당한 원고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우철(1933. 2, 89쪽)은 원고료는커녕 자신이 쓴 글이 실린 잡지조차도 보내주지도 않는다면 『비판』의 발행인 송봉우를 비판하기까지 하였다.⁹⁾ 그러나 이 문제도 당시 사회주의 잡지가 주의와 사상을 함께 하는 운동가를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철호(1932. 10, 50쪽)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왜 원고료의 미지급이 문제될 수 없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자기가 딸리어 잇는 쏘는 갖가히 잇는 그 출판물에 대하여는 주의를 위하여 원고료를 받기는커녕 경영이 곤란하다면 출판비를 보조까지라도 하면서 그것에 글을 쓸 것이라는 것 안이 벌써 써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실이다.

주의를 위하여 원고료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지적 연대가 사회주의 잡지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잡지의 경영난과 함께 잡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을 괴롭힌 것은 원고 부족이었다. 즉, 잡지를 둘러싸고 있는 동질의 주의자가 적어지면 당연히 잡지에 게재할 원고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각 잡지마다 원고를 모집하는 사고가 자주 등장했다.

『조선지광』은 속간한 지 일년이나 경과했지만 원고가 없어서 고생한 적이 처음이라며 원고 모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잡지의 편집자는 글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 “글쓰는 사람들의 공황”이라고 하였는데(『조선지광』 제58호, 편집여언), 이 글을 게재한 1926년 8월이라는 시기는 제2차 조선공산당이 6·10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괴멸적인 검거를 당한 시기였다. 사회주의 진영

9) 잡지사에서 필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문필가협회(文筆家協會)’라는 단체가 발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판』은 현재의 경영상태로서는 원고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고 대신에 독자·경영자·필자가 모두 서로 힘을 합하여 경영을 튼튼하게 하자고만 말해 원고료 지급에 부정적이었다(『비판』, 제17호, 51~52쪽).

으로 보아서는 사상과 운동에 관해 글을 쓸만한 필자가 검거를 당했거나 혹은 지하로 숨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일월회의 기관지인 『사상운동』의 경우에도 제2권 제3호(1925년 10월호)에서 잡지의 분량을 줄이고 그 내용도 다른 때와 달리하였는데 그 이유가 “맹장(猛將)들이 혹은 유치장에 혹은 본국에 갇숨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잔병(殘兵)고졸(孤卒)이엿슴으로 체제의 정돈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필자가 부족한 상황은 1930년대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비판』의 한 필자는 청탁받은 글의 주제에 대하여 경험도 없고 연구도 없는데 ‘무엇이든지 쓰라’고 하여 부담이 많다고 토로했다(엠.에치학인, 1931. 5, 58쪽). 문예물을 게재하지 않겠다고 한 『신계단』이 제2호부터는 그 편집정책을 변경하여 다시 문예물을 취급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필자는 지면을 채우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지 『신계단』이 편집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조병화, 1933. 1, 136~137쪽). 따라서 『조선지광』이 문예물을 많이 취급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편집방침 상 고정(苦情)으로써 그에 응답할 수 없게”(『조선지광』, 제64호, 편집여언)없고, “현하의 형편으로는 이 역(亦) 부득이한 일”(『조선지광』, 제65호, 편집여언)이라고 변명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잡지가 편집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잡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독자들로부터도 “쉽게 쓰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조선지광』은 제70호 ‘사고’를 통해 자신들의 잡지기사가 독자들로부터 너무 고급 또는 난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고, 『비판』도 한자가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다는 독자의 편지를 받았다고 고백했다(사통오달, 1935. 11, 76쪽). 『신계단』도 쉽게 쓰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신계단』, 제9호, 편집후기). 그러나 이들 잡지는 쉽게 쓰라는 독자의 요청을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비판』이 독자의 항의를 수용하여 “축호(逐號)해서 한자를 적게 사용”(『비판』, 제5호, 허리를 펴면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잡지 『대중』이

“‘대중’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써야 함을 잘 알지만 쉽게 쓴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 “그도 부득의한 사”라고 하여 그 고충을 말했다(『대중』, 제3호, 편집실에서). 다만 『노동운동』이 한글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신계단』이 중간호인 11호에 이르러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즉 ‘글을 써보내시는 여러 형제들’이라는 사고를 통해 아무리 좋은 원고라 하더라도 한문이 많고 어려운 것은 게재하지 않겠다는 편집방침을 알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 숫자가든 것 이외에는 한문자를 쓰지 말며 필요한 때는 한글로 쓴 미테다 달 것, 이, 어려운 것을 쓸 생각을 말고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것을 쓰도록 힘쓸 것, 삼, 직접 생활에 대한 이약이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과 맞부처서 이약이 하도록 힘쓸 것, 사, 길다랗게 쓸 생각을 말고 간단 명료하게 쓸 것” 등이었다. 그리고 『신계단』은 실제로 11호의 편집을 이 방침에 따라 한글 위주로 하였다. 기사를 구어체로 편집했으며, 대화체의 기사도 넣어 농촌진흥운동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만약 이 잡지가 11호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행했다면 다른 잡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잡지는 마지막까지도 국한문혼용체를 고수하였다. 따라서 정운영(1932. 5, 51쪽)이라는 한 독자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주의 잡지가 어렵게만 쓰는 것은 곧 “일부 지식계급에 선물(贈物)”이라고 말한 지적은 의미심장한 것이었다.¹⁰⁾

이와 같이 경영과 편집의 문제로 인한 잡지 발행의 어려움은 잡지 발행의 목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잡지 발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처럼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주의를 선전하고 운동론을 전파하는 매체로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주의 진영이 가진 보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위부대라고 생각한 이들이 사상단체와 당에 관계하여 발행한 잡지는 경영난과 편집난보다도 동지적

10) 『동광』도 기사작성에 있어 네 가지 표준 중의 하나로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고 평명하게”(독자와기자, 1926. 5, 48쪽)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잡지 기사를 쉽게 쓰려 노력한 것은 비단 사회주의 잡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사회주의 잡지에게는 모순이었다.

연대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와 사상이 다른 잡지에 원고를 기고하는 것도 극렬히 반대했던 것이다(안덕근, 1933. 2). 노동자 농민 계급을 독자로서 또는 동지로서 잡지의 주위에 굳건히 둘러 세우고 이들과 함께 잡지 발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전진해나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잡지의 편집이 진정으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식계급을 위한 것이었는지 잡지의 발행인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지면상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¹¹⁾ 끊임없이 노동자 농민 대중의 살아 있는 글을 보내달라고 독자 대중에게 요청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전하는 글은 지식계급의 방식으로 쓰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주의와 주장이 그리고 운동론이 대중의 심층부까지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식인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국한한 논쟁의 장으로 잡지가 이용된 성격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하겠다.¹²⁾

3) 사회주의 잡지의 지국 운영과 현황

사회주의 잡지가 잡지를 판매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개별 독자에게 우편 발송으로 판매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국내를 포함하여 국외에 지국(支局) 또는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이곳을 통해 잡지를 배포하여 판매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방식은 독자로부터 잡지대금과 별도의 우편료 1전(錢) 내지 2전을 선금으로 함께 받아 우송하는 것이었는데, 이 돈이 잘 견히지 않아 경영에

11) 천도교에서 발행한 『신인간』의 경우 주독자층인 농민·부녀자 계층을 위해 전반적으로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었던 점은 이러한 상황과 비교된다(김미영, 2004, 22~23쪽).

12) 한기형(2006)은 신간회의 해체를 둘러싸고 『조선지광』에서 벌어진 논쟁을 예로 들며 당시 사회주의 잡지가 ‘합법적 전체성’을 망각하고 파벌투쟁을 드러냄으로써 대중공작에 실패했음을 언급했다. 즉, 사회주의 진영의 내부투쟁에 합법적 잡지를 이용하는 정치적 미숙성이 곧 대중과의 접점을 잃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기도 한 것이다.

많은 곤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에게 밀린 구독료를 속히 보내달라는 사고가 자주 지면을 채웠다. 후자의 방식은 일정구역을 관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잡지에 따라 보증금을 받고 지분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잡지의 판매를 허가해주는 방식이었다. 잡지사는 이 지분국이 주문하는 잡지를 부수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주어 그 차액으로 지분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0년대에 발행한 잡지사는 특히 후자의 방식을 선호하여 지사 설치 및 배포망 확립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들 잡지사가 영업 목적으로 지분국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지분국은 단순하게 잡지만 배포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운동』 대구지사장은 대구 청년동맹위원 추성해로 지역사회운동에 관여하고 있었고(『조선일보』, 1927년 9월 3일자 2면), 전북 부안의 『비판』 지사장 백남철도 불온선전의 혐의로 경찰에 검속당하는(『동아일보』, 1932년 3월 3일자 7면) 등 지역의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사상운동』의 경남 하동지국과 평남 평원지국은 지역민의 체육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등 그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잡지사의 지국은 잡지사와 함께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전파하는 동지적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잡지의 지국이 갖는 성격은 잡지 『해방운동』의 발행진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다맛 일개의 편편(翩翩) 소잡지를 발행함으로만 만족치 안이하오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목적이 안이외다. 썩르좌-지에게 피를 빨리는 무산계급이 있는 곳에는 어대를 물론하고 반다시 우리의 발랄한 운동이 있어서 할 것이외다. 그럼으로 본사에서는 해(海)의 내외를 물론하고 어대이거나 우리의 운동이 잇슴직한 곳에는 지사를 설치하여 동일한 보조의 하(下)에 우리의 운동을 운행코저 하오니 유지하신 동지는 이것을 항례(恒例)로 잇는 모신문의 지국이나 모잡지사의 지사가 튼 것으로 돌니지 말으시고 만히 응하시와 우리의 운동이 무선전신과 가티 감응이 민속하고 원구(圓球)와 가티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심을 바래나이다(『해방운동』, 제1호).

즉, 각 지사는 본사가 발행하는 잡지의 배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잡지의 주장과 운동에 참여하는 전국적 연결망으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본사는 지사로 하여금 그 지역의 기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지방소식이 잡지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선』은 “지사책임 동지에게는 그 지방통신원으로 인(認)”한다고 하여 지방기자의 역할을 맡겼고(『전선』, 제5호, 56쪽), 『집단』도 지사에게 정보의 전달을 임무로 맡겼다(『집단』, 제2호). 또한 잡지 『대중』도 제2호 ‘사고’에서 각 지사에게 ‘보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겨 취약한 지역 소식을 채우려 하였다.

한편 이들 잡지의 본사와 지사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한 내용은 잡지 『집단』 제2호에서 살펴볼 수 있다(『집단』, 제2호, 집단사 지사설치에 대하여).

일, 뿌르조아잡지의 영리지사와 달니 집단사의 지국은

- ① 배포망의 완성
- ② 독자의 조직적 획득
- ③ 레포(통신·정보)의 송달
- ④ 기금의 수집을 그의 기본적인 임무로 함

이, 지국의 만전(萬全)한 독자적인 활동을 위하여 좌기와 여히 지대(誌代)를 할인하여 지국비로 사용케 함

- ① 50부 이하 주문에 대하여 2할인
- ② 50부 이상 주문에 대하여 3할인
- ③ 백부 이상 주문에 대하여 4할인
- ④ 3백부 이상에 대하여 5할인

단 보신금(保信金)이 업슴으로 지대는 반듯이 선금을 요함

삼, 지국은 광고를 취급케 함(5할인)

사, 지국은 본사출판의 일체서적을 취차(取次) 판매케 함(2할5분)

오, 지대와 광고내규는 여좌함

- ① 집단의 정가는 일부에 10전
- ② 광고대는

일혈전면(사륙배판) 30원야(也)

반면 15원야

3분지 1 10원야

4분지 1 7원 50전야

이하는 차에 준함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잡지의 배포와 운동을 겸한 사회주의 잡지의 지국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분포했을까. 이를 살피기에는 적지 않은 권호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추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선지광』이 주간으로 발행을 변경한 이후 전국의 각 곳에 설치한 지사의 현황이 자료의 미비로 인해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고, 『사상운동』은 지분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지의 지면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¹³⁾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잡지의 ‘사고’를 통해 이들 잡지의 지사 수와 그 분포의 경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는 1926년부터 1936년까지를 중심으로 각 잡지가 전국에 설치한 지분국의 수와 그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지분국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데는 『동아일보사사 1』(1975)을 따랐다. 다만 제주도 지사는 전남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현황을 알기 위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동아일보사사 1』에서도 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곳이 있었듯이 지사의 명칭만을 가지고서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지사는 미상(未詳)으로 분류했다.¹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상운동』, 『현계단』, 『이론투쟁』 등 세 잡지를 제외한 7개의 잡지가 설치한 지사 수는 총 391곳이었다. 이 중 『비판』이 해외에 15곳을 비롯하여 국내에 134개를 설치하여 이들 잡지 중 국내외적

13) 『사상운동』은 제1권 제1호 편집여언에서 “본사지분국 등 표는 차호로 미룬다. 지분국 동지들은 이 무산자의 언론기관을 위하여 힘껏 두호(斗護)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지만, 제2호를 비롯하여 그 다음 호에서도 지분국은 나타나지 않았다.

14) 이들 지사의 지명은 『집단』의 ‘용대(龍臺)’와 판독이 불가능한 『노동운동』의 ‘벽□(碧□)’ 등이다.

<표 4> 사회주의 잡지의 지분국 수와 범위

	조선 지광	비판	노동 운동	전선	집단	신계단	대중	합계
경 기	2	8	1	0	9	2	0	22
강 원	2	9	0	2	4	2	6	25
충 북	1	4	1	0	0	1	1	8
충 남	2	11	2	0	3	5	5	28
경 북	2	11	2	2	3	3	2	25
경 남	3	9	1	2	11	6	8	40
전 북	5	5	2	2	5	0	0	19
전 남	4	11	2	2	6	4	2	31
제 주	0	1	1	1	1	0	1	5
황 해	1	14	0	2	5	4	2	28
평 남	1	8	0	1	0	2	1	13
평 북	1	10	1	1	6	2	3	24
함 남	4	21	2	3	15	9	6	60
함 북	1	12	1	2	9	2	4	31
해 외	2	15	0	3	6	1	3	30
미 상	0	0	1	0	1	0	0	2
합 계	31	149	17	23	84	43	44	391

*출처: 필자가 열람이 가능한 모든 잡지에 등장하는 지분국 설치 공고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임

으로 가장 활발한 지사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⁵⁾ 이 국내외 지사 수를 합하면 149개로 『비판』은 가장 많은 지분국을 소유한 잡지였다. 『비판』 발행진이 제15호에서 지사의 숫자가 ‘내외삼백’ 개라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잡지를 배포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표 4>는 잡지의 지사가 함남지역에 총 지사 수의 약 15%인 60개가 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1930년대에 발행한 잡지가 이 지역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흥남과 원산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이 발생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흥남은 태평양연안국가의 혁명운동을 돕기

15) 『비판』은 두 번째 호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로는 ‘파리, 노도(露都), 동경, 대만(臺灣), 남양(南洋)’까지 잡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하였다(허리를 펴면서).

위해 탄생한 ‘태평양노동조합’이 조선에서의 노동운동 중심지로 삼은 곳이었다. 흥남의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혁명적 운동은 1930년대 초기 출판물 발간과 독서회 조직 등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원산도 이미 1929년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운동이 더욱 성숙해져 기존의 독서회를 통일하여 ‘원산독서회책임자회’를 결성하고 신문배달반, 가두반 활동 등을 전개하는 등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나서고 있었다(김경일, 2004, 270~285쪽). 이러한 두 도시의 상황은 이들 사회주의 잡지의 판매에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함남에서의 지분국 숫자가 다른 곳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계단』과 『이론투쟁』은 지분국이 필요없다며 지분국을 갖지 않았다.¹⁶⁾ 다만 『이론투쟁』이 폐간한 후 그 잡지의 독자를 승계한 『현계단』은 다른 잡지와는 다른 발행전략을 폈다. 즉, “제국주의의 성새(城塞)을 돌파할 군비금” 일천원 모집 운동에 나서는 한편, 입사금과 유지비 납부에 의한 동인(同人) 및 사우(社友)를 확보하는 사업에 치중하였다. 후자의 제도는 이미 1925년 12월에 『조선농민』을 창간한 천도교 산하 ‘조선농민사’가 시행한 것으로 “매년 1원금을 출(出)해야 잡지 조선농민을 구독하는 인(人)은 보통사우로 하고 5원 이상의 본사유지비를 부담하는 인은 특별사우”로 하여 조선농민사를 조직했던 것이다(박사직 술, 1930. 7, 6쪽). 『현계단』이 동인 및 사우제도를 시행하면서 내걸은 규정은 다음과 같다(『현계단』, 제1호).

규정대요(規定大要)

일, 입사금 일원과 유지비 매월 3원 이상 혹은 매년 30원 이상을 지출하는 자를 동인이라 칭함.

일, 입사금 일원과 유지비 매월 1원 혹은 매년 10원 이상을 지출하는 자를 사우라 칭함.

16) 그러나 『이론투쟁』이 『대중신문』의 지국으로 배달되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조선일보』, 1927년 8월 29일자 4면)으로 보아 비록 지사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국내의 다른 지국망을 이용은 한 것으로 보인다.

일, 동인과 사우의계는 동인증 사우증 급(及) 본사 동인사우메달과 본사 일체의 정기 급(及) 임시간행물을 무료제공함.

일, 단 동인 급(及) 사우의 권리의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동인 급(及) 사우증에 유(有)함.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그 후속보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전자의 운동은 제2호에서 성공적이라고 했다. 이 모금운동 전개 이후 “만천하의 동지의 열렬한 적극적 응모는 수(滲)히 만주의 별판을 거쳐 내지에서 일본에서 모하여 들어온 것이 임의 2백 원대를 초월”하여 이제 그 목표액에 8백 원 남았다고 한 것이다. 이 모금운동에는 40원을 보내온 자도 있었고, 『동아일보』도 5원을 보내왔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도교에서 추진한 운동처럼 강한 조직적 기반이 필요한데, 『현계단』 발행진은 사회주의 진영의 조직적 기반을 낙관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분국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사상운동』은 국내에 10여 개소의 지분국을 두고 구독자로도 6백여 명을 확보하며 발행했다. 특히 조선공산당 동만청년연맹 독서부를 통해서 만주, 북간도 지역에 『사상운동』의 총지부를 두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77쪽). 신문기사 및 문헌을 통해 『사상운동』의 지국을 살펴보면 평남 평원지국(『동아일보』, 1925년 3월 27일자 3면), 경남 하동지국(강만길·성대경, 1996, 94쪽), 초산(楚山)지국(『동아일보』, 1925년 5월 24일자 2면), 대구지사(『조선일보』, 1925년 6월 13일자 2면), 상주(尙州)지국(『동아일보』, 1926년 2월 15일자 4면) 등 5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발행하면서도 잡지의 국내 배포를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잡지 본사와 지분국은 단순한 잡지의 유통을 위한 관계 이외의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즉, 지분국은 사회주의 잡지를 배포함과 동시에 그 잡지가 가진 사상과 운동을 전파하는 선전체이자 조직체였고, 본사에게 지분국은 전국 각지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나침반이었다.¹⁷⁾ 그러나 1920년대 후반기보다 1930년대에 지분국 수가 증가한 것은 효율적인 잡지 배포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려는 잡지 발행진의 고민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계단』이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잡지의 발행을 도모하는 데 집중했다면, 『비판』은 독자에게 잡지 대금의 납부를 독촉하기보다는 지분국의 확보를 통해 재정문제도 해결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중과의 만남도 지속시키려 하였다.

6. 연구의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 11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의 전파를 위하여 발행한 이들 잡지의 발행 현황과 지국 운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잡지의 발행이 가능해진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의 발행을 허가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후 출판법에 의해서도 잡지가 정치와 시사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사회주의를 지면에 담는 잡지가 다수 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들 잡지에 대해 각종 통제를 가하여 정상적인 발행은 불가능했다. 매호 원고 검열로 인해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수시로 발행금지 조치를 당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잡지 발행인이 ‘경영난, 원고난, 편집난’이라고 한 것은 결국 ‘검열난’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잡지 발행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잡지 발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은 이들 잡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선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가능했다. 주의를 함께하는 잡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운동가들이 모였고, 이들은 원고료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의 매체운동으로서 잡지를

17) 레닌이 신문을 가리켜 “집단적 선전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선동자이며 집단적 조직자”라고 한 주장은 사회주의혁명에 있어 매스미디어의 도구화를 말한 것(Sievert, F. S., Peterson, T., & Schramm, W. 1956/1991, 158쪽)으로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는 이러한 사회주의 언론관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했다 하겠다.

발행했다.

사회주의 잡지가 독자와 만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별 구독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잡지를 우편 발송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지사나 분국을 전국 각처에 두고 이를 통해 잡지를 배부하는 것이 그것이다. 개별독자의 경우 1920년대 후반에는 구독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잡지는 밀린 대금을 속히 보내달라는 ‘사고’를 자주 게재하였다. 『현계단』은 이와는 달리 동인 및 사우를 모집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잡지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현계단』의 이러한 방식은 『집단』과 『이러타』에서도 ‘유지원’ 또는 ‘유지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후원회 성격을 갖는 것으로 조직적 기반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들 잡지는 사회주의운동 진영과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계단』이 제2호를 각종 단체에 무료로 배부한 것은 이들 단체를 『현계단』 주위에 묶어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잡지는 지분국을 설치하여 잡지를 유통시키는데 이들 잡지의 지국은 배포망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즉, 각 지사는 본사가 발행하는 잡지의 배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잡지가 주장하는 바와 운동에 참가하는 전국적 연결망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본사는 지사로 하여금 그 지역의 기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지방소식이 잡지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잡지의 지분국은 본사와 지사 간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잡지의 배포망이자 보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1930년대 들어 이러한 관계는 다소 약해지지만 잡지 발행진은 여전히 지분국을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역할을 규정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잡지는 1920년대 국내로 들어온 새로운 사상인 사회주의가 대중에 뿌리를 내리며 “조선민중운동의 주조(主潮)를 형성”(배성룡, 1926, 30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 잡지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선전의 마당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논쟁을 전개하는 운동의 광장이었다. 잡지를 이용한 언론활동과 병행하여 이들 잡지는 지분국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을 조직하고 사상을 전파하는 사회주의 언론운동을

이끌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잡지는 일제의 탄압에서 오는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핵심적인 지식원(知識源)”(김민환, 2005, 281쪽)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운동의 구심체로의 역할도 담당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사회주의 잡지는 일제의 검열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올바르게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곧 발행금지와 발매금지로 이어져 잡지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독자로부터 ‘쉽게 쓰라’는 요청이 있었듯이 사회주의 잡지는 발행 내내 대중이 읽기에 매우 어려운 국한문체를 고수하였다. 『현계단』이 창간호에서 “본지는 소수지식군의 이론적 유희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압박받고 박해당하는 자의 불평 분노를 반영하는 거울이려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지면의 편집만을 놓고 볼 때에는 결국 사회주의 지식계급을 위한 잡지의 역할에 치중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이척(1933. 1, 5쪽)은 민족운동의 영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공장노동자 10만 명에 문맹률이 86%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계급의 영도권을 부정했는데, 그의 주장처럼 사회주의 잡지가 그토록 중시한 혁명계급의 대다수가 글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난해한 문장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은 글을 읽고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지식계급을 대상으로 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가 사회주의의 효과적인 전파를 가로막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잡지의 지국운영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잡지의 지사는 본사와 긴밀한 연대감 속에 놓여 있었다. 지사는 사회주의 잡지의 배포망이자 운동선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운영상태와 활동상황을 고찰하는 것은 사회주의 잡지의 실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했음에도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 부분을 깊이 있는 연구로까지 진전시키지 못했다. 둘째 시기 구분을 통해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변화를 규명하지 못했다. 신문이 1930년대에 급격한 기업화에 들어서면서 그 성격이 상업지로 변화하고 기자 또한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

어나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용규, 1994, 234~235쪽)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상황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민족주의 계열의 잡지를 비교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사회주의 잡지가 당시 사회에서 차지한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진영에서 발행한 『동광』, 『동명』 등과 천도교 계열의 잡지 『혜성』, 『제일선』, 『신인간』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만길·성대경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 김경일 (2004). 『한국노동운동사 2: 일제하의 노동운동 1920~1945』. 서울: 지식마당.
- 김규환 (1978). 『일제의 대한언론·선전정책』. 서울: 이우출판사.
- 김기진 (1965. 3). 단일전선과 주도권 쟁탈기. 『세대』, 제20호. 임규찬·한기형 엮음 (1989). 초창기에 참가한 늦동이 나의 회고록. 『카프비평자료총서 I』. 서울: 태학사.
- 김근수 (1980). 『한국잡지사』. 서울: 청록출판사.
- 김남천 (1933. 5). 문학시평: 문화적 공작에 관한 약간의 시감(時感). 『신계단』, 8호, 76~84.
- 김남천 (1933. 6). 잡지문제를 위한 각서. 『신계단』, 9호, 80~87.
- 김동인 (1969). 『동인전집』, 제10권. 홍우출판사.
- 김문중 (2004). 개화기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과학』, 제21호(통권 23호), 115~137.
- 김미영 (2004). 일제하 천도교신파의 『신인간』지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환 (2005). 일제하 좌파 잡지의 사회주의 논설 내용 분석.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276~299.
- 김은 (1927. 9). 구신(舊新)로서아의 사회성과 문학적 경향. 『조선지광』, 제71호, 55~63.
- 김우철 (1933. 2). 문필가협회와 카프의 태도-그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여. 『신계단』,

제5호, 86~91.

김인덕 (1996). 『식민지시대 제일조선인운동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김재용 (1989). 프로문학론의 전개.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26~85쪽). 서울: 역사비평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3.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동아일보사사(社史)』, 권1. (1975). 서울: 동아일보사.

박사직 술(述) (1930. 7). 조선농민사의 발전과정: 이성환 등 기(幾)개인의 탈퇴진상.
『농민』, 제3호, 부록 1~32.

박용규 (1994). 일제하 민간지 기자 집단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직업의식과 직업적 특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5). 식민지 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제29집,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79~120.

박정규 (2004). 대한매일신보의 참여인물과 언론활동. 『대한매일신보연구』 (66~
112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철하 (2003).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단체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성룡 (1926. 3). 조선사회운동의 사적고찰(1). 『개벽』, 제67호, 22~33.

사통오달. (1935. 11). 『비판』, 제25호, 74~78.

안덕근 (1933. 2). 뿌르조아 출판물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 태도 - 김극광(金克光)
군의 소론을 중심으로. 『전선』, 2호, 68~73.

양명 (1926. 12). 사회과학진보와 종교(2) - 염광섭군의 종교와 인생과의 관계를
박(駁)함. 『조선지광』, 제62호, 28~42.

엠·에치학인 (1931. 5). 사회조직과 신문 - 조선신문경영자의게 일침(一針). 『비판』,
제1호, 58~61.

유시현 (1990). 1920년대 전반기 조선의 사회주의 사상 수용과 발전.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하 (767-802쪽). 서울: 창작과비평사.

유재천 (1986). 일제하 한국신문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其2). 『동아연구』,
제9집, 229~272.

_____ (1988). 일제하 한국잡지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제15집,
17~52.

위종기 (1928. 4). 최근조선문간행물개관. 『시사평론』, 제356호, 35~48.

- 이복만 (1927. 11). 예술운동의 방향전환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는가? 『예술운동』, 제1호, 9~26.
- 이종호 (2005). ‘개벽’의 원본 분석을 통한 1920년대 검열 제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척 (1933. 1). 사이비 운동이론의 비판 - 영도권문제에 대한 재론. 『신인간』, 제6권 제1호, 2~8.
- 임화 (1939. 6). 문예잡지론 - 조선잡지사의 일측면 -. 『조선문학』, 제19호.
- 전명혁 (1998).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운동 연구 - 서울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상숙 (2004).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정근식 (2005).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 제51집, 1~44.
- 정운영 (1932. 5). 되도록 쉽게 쓰라. 『비판』, 제13호, 51.
- 정진석 (1975).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서울: 정음사.
- _____ (1978a). 일제하의 언론 출판 연구 (上). 『신문연구』, 봄호, 240~277.
- _____ (1978b). 일제하의 언론 출판 연구 (下). 『신문연구』, 가을호, 290~321.
- _____ (1983). 『한국언론사연구』. 서울: 일조각.
- _____ (1995). 파인 김동환과 ‘삼천리’. 『삼천리(영인본)』 (6-13쪽). 서울: 한빛.
- _____ (1998). 해제: 일제의 탄압과 언론의 저항.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I』 (6-30쪽). 서울: LG상남언론재단.
- _____ (2001). 『언론과 한국 현대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5). 『언론조선총독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병화 (1933. 1). 독후감. 『신계단』, 제4호, 135~137.
- 조풍연 (1943. 2). 신문기자와 잡지기자. 『춘추』, 25호.
- 한립 (1926. 2). 연구과정. 『사상운동』, 제3권 제2호, 40~42.
- 한기형 (2006).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 역학. 『한국문학연구』, 제30집, 171 ~ 202.
- 한만수 (2001). 식민시대 문학의 검열 대응방식에 대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5집, 343~366.
- _____ (2004. 12. 17). 검열, 복자(覆字), 그리고 원본 확정에 대하여. 『식민지 검열 체제의 역사적 성격』 (29~64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_____ (2005. 8). 식민지시기 교정쇄 검열제도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제28권,

125~161.

- _____ (2007).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제39집, 227~253.
- 한철호 (1932. 10). 문필가협회에 대한 원칙적 의문. 『신계단』, 제1호, 49~55.
- _____ (1932. 12). 조선내 제반동적 유파의 농민-농업이론을 비판함. 『신계단』, 제3호, 9~13.
- 함철산 (1933. 6). 일본의 연맹탈퇴 이후의 국제정국여하(如何). 『비판』, 제23호, 30~31.

梶村秀樹·姜德相 (編) (1972). 『現代史資料』 29, 東京: みすず書房.

朴慶植 (編) (1983). 『在日朝鮮人運動關係機關誌解放前』. 川崎: 아시아問題研究所.

山口吸一 編 (1939). 『改訂 朝鮮制裁法規』. 京城: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言論人金三奎刊行委員會 (編). (1989). 『言論人金三奎』. 川崎: 言論人金三奎刊行委員會.

朝鮮軍參謀部 (1936. 8). 昭和11年 前半期 朝鮮思想運動概觀. 민족문제연구소 (편) (2001),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65卷』 (1~152쪽). 고양: 한국학술정보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昭和 五年)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京城.

_____ (1932). 『(昭和 七年)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京城.

_____ (1934). 『(昭和 八年) 朝鮮出版警察概要』. 京城.

_____ (1937). 『(昭和 十一年) 朝鮮出版警察概要』. 京城.

_____ (編) (1939). 『(昭和 十三年)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김봉우 역 (1989). 『일제식민통치비사- 일제하 조선의 치안상황-』. 서울: 청아출판사.

Sievert, F. S., Peterson, T., & Schramm, W. (1956). *Four Theories of Press*. 강대인 역 (1991). 『언론의 4이론』. 서울: 나남.

Suh, D. S. (1967). *The Koreans Communist Movement, 1918~1948*. 현대사연구회 옮김 (1989).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서울: 이론과실천.

(최초 투고 2007. 8. 19, 최종 원고 제출 2007. 11. 1)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Branch and the Publish of Socialist News Magazines

Moon-Jong Kim

Lecturer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socialist news magazines between 1925 and 1936 under the Japanese regime, then to analyze how they published and how they managed the branch. The socialist magazines appeared legally and officially right after the 3·1 movement when the ownership and publishing of newspapers and news magazines was partially allowed. However, there were many obstacles because the permission by the Japanese regime was a result of deceptive cultural policy. The Japanese government more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socialists' related news stories rather than other types of publications. Due to over-censorship and financial difficulty, the life time of most socialists' news magazines was very short. However, these news magazines did play an important role to disseminate socialism. In doing so, because the news magazines were a part of social movements, the delivery network was also maintained based on social movements.